



스페인 세우타의
북아프리카계 난민 위기
2, 3면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
6~8면

미 국방부,
전술핵 확대 검토
9면

10월11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10면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12, 11면



미국 민주사회당의
부상 4~5면

스페인 세우타의 북아프리카계 난민 위기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 탓이다

추방 반대
난민 환영

관련 기사 2~3면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마시 텅글라-에번스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으로 모로코에서는 원래 ‘세브타’로 불렸다)로 수만 명의 난민이 진입하려 하자,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

최근 약 5만 명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들어가려 했다.

미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극우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스를 공격하고 있다. 산체스는 이민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다른 유럽 지배자들에 견줘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분노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시 산체스 정부를 향한 공격에 가세했다. 산체스 정부는 테러 국가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벌이자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식민 정착자 국가인 이스라엘의 유엔 주재 대사 다니 달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왜 스페인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식민지 영토가 있는지 어디 한번 전 세계에 설명해 보라.”

그런데 일부 좌파와 논평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스러운 주장들이 돌고 있다. 그 주장인즉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모로코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눈 밖에 난 스페인을 응징하기 위해 난민 위기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산체스 정부의 팔레스타인 관련 입장 때문에 스페인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자가 취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입장

스페인은 세우타·멜리야 등 북아프리카에서 점령 중인 모든 땅에서 나가야 한다.

이곳들은 스페인 제국이 15~17세기에 점령한 곳들이다. 1912년 모로코가 “보호령”으로 분할될 때 스페인은 추가로 영토를 차지했다. 모로코 땅 대부분을 스페인과 프랑스가 차지했고, 모로코 북부 탄자 지역에는 스페인·프랑스·영국이 지배하는 “국제 구역”이 들어섰다. 식민 점령 강대국들이 “보호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조차 스페인은 세우타, 멜리야, 하하 바디스, 알호세이마, 차파리나스를 내놓지 않았다.

스페인의 식민 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제국주의 지지로 미끄러지게 된다.

그런 만큼 스페인이 “침략당한다”는 말은 대단히 반동적인 주장이다. 첫째, 세우타는 애초 스페인이 강탈한 땅이다. 둘째, 난민·이민자를 “침략자”로 낙인찍는 것은 극우의 서사다.



산체스의 사회당 정부가 군대를 보내 식민지 국경을 지키고 이민자를 탄압하는 데에 진보적인 요소는 눈곱만큼도 없다

난민 환영, 추방 반대

유럽연합(EU)은 지중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었고, 스페인은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들에서 EU의 인종차별적 이민 통제 정책을 오랫동안 집행해 왔다. 세우타로 들어가려 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은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모로코인들이고,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이다. 서방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당 총리 산체스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이민 문제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올해 스페인 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2020년 이민자들의 대규모 집회 등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

그러나 산체스 정부가 그런 진보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스페인 자본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

면서도 산체스는 계속 EU의 이민 통제 정책을 지지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의 영향력을 지키려 한다. 2022년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멜리야로 국경을 넘어가려던 이민자들을 스페인 경찰이 저지하자, 산체스는 이를 치하했다. 당시 산체스는 월경 시도를 “스페인 영토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당 정부가 군대를 보내 식민지 국경을 지키고 이민자를 탄압하는 데에 진보적인 요소는 눈곱만큼도 없다.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 말이 곧 모로코가 국경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물론 모로코는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모로코 당국은 세우타와 면한 국경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산체스 정부가 [모로코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지도적 서(西) 사하라 독립 투사의 스페인 내 병원 치료를 허용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이듬해 산체스는 서

사하라 문제에 관한 스페인의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바꾸고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를 알현했다.

많은 국가들이 난민 위기를 협상 카드로 이용한다. 벨라루스 정부가 폴란드/EU와 맞댄 국경을 건너는 난민들을 그렇게 이용했고, 이에 극우·파시스트들은 그 난민들을 비난하며 세 확장을 꾀했다.

그러나 난민 위기는 그런 책략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난민 위기의 원인은 제국주의, 인종차별, 기후 혼란이다.

월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느는 배경에는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스페인 대법원은 ‘바다를 통해 세우타와 멜리야로 온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곧바로 모로코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관리들은 최근 입국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송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적어도 수천 명이 이미 강제 출국됐다.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3만 7,000명이 이미 송환됐다고 추산한다.



모로코와 이스라엘

모로코는 식민 정착자 국가 이스라엘과 오랜 우호 관계다. 2020년 모로코는 아브라함(이브라힘) 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며 체결된 것이다. 또한 모로코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식민통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공모 역사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1965년 모로코 첩보 기구가 이스라엘·프랑스 스파이들과 공모해 메흐디 벤 바르카를 암살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있다. 벤 바르카는 모로코 독립 투사였고, 이후 좌경화하며 모로코의 하산 2세 왕정과 사이가 틀어졌다. 벤 바르카는 망명해 활동하면서 팔레스타인 등 ‘글로벌 사우스’의 여러 민족 해방 운동 및 국가들이 한데 모이는 삼대륙대회를 조직했다. 벤 바르카 자신은 1966년 그 대회가 열리기

전에 살해됐다.

모로코-이스라엘 관계는 때로 모순적인 방식으로 전개됐다. 모로코 지배자들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가 광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에 세운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서방의 사회주의자라면 다음 몇 가지를 기본 입장으로 삼아야 한다.

- 이주민·난민 지지. EU의 국경 통제 반대. 산체스 정부가 세우타에서 자행하는 일을 옹호하지 않기.
-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식민 점령 반대.
- 모로코인들의 자국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 지지. 모로코 국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궁핍을 강요하는 한편 트럼프·이스라엘·제국주의와 손잡고 있다.

출처 Tomás Tengely-Evans, 'What's behind Spanish state's migrant crisis in north Africa?' (2026. 7. 31) / 번역 김종환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를 계기로 살펴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국경 통제에 반대하는 이유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로 수만 명의 난민이 진입하려 하자,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

올해 초만 해도 스페인 정부는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 주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닥치자 ‘요새화한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이다.

한편, 좌파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를 이스라엘과 협조하는 모로코 정권이 국경을 ‘무기화’해, 유럽에서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내 온 스페인 정부를 공격한 것으로 규정한다. 국경 통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말이다.

많은 좌파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경 통제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임금 삭감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민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어느 정도 상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민 통제의 효과는 그저 손쉬운 희생양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임금의 원인을 기업주의 착취가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경쟁으로 돌릴 수 있게 한다.

또 이민 통제는 누가 쓸모 있는지를 판단할 권리를 국가가 갖는 것을 정당화한다.

대규모 이주는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전쟁과 세계적 불평등, 기후 위기를 낳기 때문에 벌어진다.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있는 지배계급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고 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돈을 보낸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려야 마땅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민 통제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켜 줄 것이라는 견해를 거부했다.

아일랜드인 이주노동자들이 잉글랜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데 이용됐을 때 마르크스는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이렇게 썼다.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승리할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면, 일국적 조직들은 반드시 국제적 조직이 돼야 한다.”

마르크스가 제1인터내셔널 창립을 도운 이유도 바로 국경을 넘는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말 등장한 사회주의 조직 제2인터

내셔널에서는 이민 통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1907년 대회에 참가한 호주 노동당의 한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가들은 임금을 낮추려고 아시아계 노동자 유입을 늘린다. ... 따라서 호주 노동당은 백인들과 같은 처우를 받으리라 예상되지 않는 특정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기를 바란다. 아시아인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견해는 맹렬한 반박을 받았다. 미국 사회주의노동당 대표단은 중국인·일본인 노동자 유입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증오는 노동자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의 폭력을 조장했다. 일본인·중국인 노동자들도 잘 조직될 수 있다.” 그해 제2인터내셔널 대회는 일체의 이민 통제가 “본질적으로 반동적”이라고 선언했다.

몇 년 후인 1913년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민 통제에 전면 반대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이주’라는 글을 썼다.

“오직 극심한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를 더없이 파렴치한 방식으로 착취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동시에 레닌은 “오늘날의 민족 이동”이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인터내셔널이 1914년에 붕괴하고 몇 년 후 혁명적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창립됐다.

코민테른은 서유럽과 미국의 공산당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민 제한 법률들에 맞서 맹렬한 운동을 벌이고, 그 나라 노동계급 대중에게 그들 또한 그 법률들이 부추길 인종 간 적대고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하라.”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은 이민 통제에 전면 반대한다.

이민 통제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다.

동시에 이민 통제는 정주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해를 끼친다. 인종차별적 분열을 조장하고 기업주들에게 향해야 할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자유 왕래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롭다.



사진 출처 DSA San Francisco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부상, 어떻게 볼 것인가?

김준호

트럼프 심판 성격으로 치러질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당(DSA)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트럼프가 그들을 (터무니없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하는 맥락이다.

대체로 이민자 2·3세인 DSA 후보들은 뉴욕·콜로라도 등 민주당 텃밭에서 현직 하원의원들을 잇달아 꺾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 워싱턴 DC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DSA 후보가 낙승했다.

당원 수도 크게 늘어 올해 12만 명을 넘겼다. 미국 역사상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 중 가장 많다.(트럼프가 그들을 “미국 25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맥락이다.)

언론들과 좌파들은 특히 뉴욕 시장 맘다니의 활약에 주목한다.

팔레스타인과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이 젊은 무슬림 정치인은 선거 전부터 이미 지역 파업에 연대하는 등의 행보로 이름을 알렸다. 선거에서는 뉴욕의 빈부 격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돌풍을 일으켰다(관련 기사 본지 562호 ‘조란 맘다니의 승리가 미국 권력자들을 패닉에 빠뜨리다’).

맘다니는 재임 반 년 동안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개혁을 제공했다. 주민 40퍼센트의 월세를 최대 2년 동결했고, 공영 식료품점을 설립해 할인가로 생필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극심한 사회 위기에 크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맘다니의 생활고 완화 개혁은 진보적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맘다니는 ICE의 이민 통제와 네 타냐후의 전쟁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운동의 확대에 기여했다. 맘다니의 인기는 뉴욕 DSA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올해 뉴욕 DSA 당원은 1만 5,000명을 넘겼는데, 그중 8,000명 가까이 최근 1년 사이 입당했다.

운동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DSA 후보들은 팔레스타인 연대를 전국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시온주의 로비 단체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이 지원하는 후보들에게 승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AIPAC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DSA의 이런 전진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에만 해도 DSA 지도부는 간판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당론을 어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안전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 때 그녀를 징계하지 않았다. 그 일 때문에 DSA 의원단은 분열했다. DSA 지도부는 기회주의적 봉합을 위해 그 이듬해 당내 반시온주의적 기구 ‘이스라엘 BDS 워킹그룹’을 해산시켰다.

그럼에도 2023~2024년 미국에서 전투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분출하자 DSA는 그 운동의 정치적 수혜자가 됐다. 새로운 청년 세대의 관심과 지지에 DSA가 초점을 제공했던 것이다.

2024년 DSA 전국 지도부는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문제 삼아 오카시오-코르테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커다란 비판에 직면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25년이 돼서야 자신의 문제적 입장을 철회했다.)

2025년에는 당 역사상 최초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대한 연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그 당론을 주도해 선거운동을 한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이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다.

DSA 당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속에서 사회개혁 염원 대중을 만나고 선동과 집회를 조직하는 법을 훈련하고, 지역 운동 단체들과 교류를 늘렸다.

DSA 지부들은 여러 지역에서 ICE 반대 저항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미네소타 DSA는 지난 1월 23일 ‘셋다운’ 시위를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최근 2~3년 동안 DSA는 기층에서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트럼프의 ICE 반대라는 중요한 전국적 대중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에 식상하고 트럼프 일당의 전횡을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개혁 염원의 대변자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일각의 평가처럼 맘다니 등이 민주당을 수완 좋게 이용하고 ‘힉한’ 정책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맘다니는 노동자 파업에도 적극 연대했다. 사진은 시장이 되기 전 맘다니가 택시 노동자 파업 지지 단식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NY Taxi Workers Alliance

DSA의 정치 전략

최근 미국의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39퍼센트, 청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처럼 급진화하는 보통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DSA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기성 정치 질서 안에서 민주당에 대한 좌파적 불신을 나뉘므로 표현하는 것이다. 차악론에 대한 모순된 거부인데, 그 방향은 좌경화다.

미국의 경제·정치·사회 위기가 그만큼 첨예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권력자들은 DSA의 인기를 민주당 득표 향상에 활용하면서도 좌파 혐오를 드러내며 견제를 늘리고 있다. 콜로라도 민주당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는 예비경선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콜로라도를 망치게 두지 말자, 누구도 재산 규모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선동했다.(그런데 폴리스의 순자산은 4억 달러에 이른다.)

친민주당 언론 <애틀랜틱>은 DSA가 “민주주의와 법치와 자유를 경멸하는 권위주의 지지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처럼 스탈린주의를 연상시키려 한 것이다. 민주당이 DSA를 단속하지 않으면 “정치적·도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애틀랜틱>은 개탄했다.

민주당 진보파와의 동맹?

현재 DSA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맘다니가 속한 그룹은 ‘사회주의 다수파’다. 당 내에서 유력한 그룹인 이들의 강령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고 이들의 노선은 리버럴 정치 세력과 동맹을 맺는 것(민중전선 전략)이다.

이 그룹은 DSA 창당 지도자인 마이클 해링턴의 정치를 계승하고 있다. 해링턴은 노동계급이 독자적으로 체제를 변혁할 수 없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유일하게 현실적인 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파해 왔다. 즉, 민주당 안에서 그 당의 ‘진보적’ 부분과 협력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더 자세한 설명은 본지 322호 기사 ‘DSA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참고하시오.)

맘다니는 이를 두고 “루스벨트의



DSA 약진은 변화 염원의 성장이지만, DSA의 전략은 그 염원을 일관되게 대변할 수 없다

‘뉴딜’이나 [1930년대 민주-공화당 통합 뉴욕시장] 라파디아의 복지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도서관, 소방관, 공립학교 같은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선별적이지 아니라 모두에게 제공하는 정치”라고도 설명한다.(“하수도 사회주의”)

즉, DSA 주도파가 말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현실적인 길”은 민주당 개혁파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또한 그 덕분에 DSA가 민주당이라는 기성 체제의 정치 구조 일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즉, 그 노선의 현실성은 대중이 그런 수준의 개혁으로 만족하거나, 민주당 권력자들이 그런 개혁 노선을 당 내에서 계속 용인할 때만 ‘현실적’이다.

이 지점에서 DSA 주도파의 ‘현실주의’는 DSA를 부상케 한 운동과 급진적 지지자들의 염원(부분적 차악론 거부)과 본질적으로 모순된다.

지지자들의 DSA 지지에는 기성 민주당 권력자들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깔려 있고, 민주당이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고 싶은 개혁과 변화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활용 노선이 불가피한 전술을 넘어 더 넓고 장기적인 전략이라면, DSA의 실천은 거듭 민주당

을 진보적으로 포장하고, 경선에서 패하면 역겨운 민주당 주류 후보들을 지원해야 하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바이든 정부를 포장하느라 자신들의 좌파적 신용을 탕진해 버렸다.

기성 정치 구조의 핵심적 일부인 민주당 기구에 적응하게 되면 책략이 미덕이 되고, 대중은 수동적 위치로 놓이게 된다. 조직 운영은 기성 정치 체제의 비민주성을 닮아간다.

맘다니는 (사회개혁 염원 대중의 우려에도) 전임 시 정부의 전문 관료들, 특히 악명 높은 뉴욕시경찰청(NYPD) 수뇌 제시가 티쉬를 유임했다.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할 시장 직속 기구에 주류 경제학자와 부동산 기업 대변자들을 선임했다.

비판적 지지와 대중 운동 건설

맘다니의 이런 중도 행보는 보수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는 기성 권력자들에 대한 순응일 뿐이다.

또한 맘다니는 ICE의 인종차별적 폭력 만행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끓어오를 때 두 차례나 트럼프를 만났다. “생활고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한 그 만남을 통해 맘다니는 생활고 완화 개혁에 휘방을 놓는 민주당 권력자들을 견제하며 수완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당시 격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에게 ‘말이 통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 기회와 숨 쉴 틈을 줬을 뿐이다.

올해 7월 맘다니 계열은 DSA의 대선 후보 선정 절차에서 당원 투표를 폐기하고 “숙의”로 대체하려 했다. 이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DSA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는 의심을 샀다.(이 절차 수정에 대한 결정은 내년 당 대회로 미뤄졌다.)

맘다니는 또한 이번 중간선거 예비경선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했다. 맘다니는 네타냐후가 뉴욕에 오면 체포돼야 한다고 공표하고,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후보들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적 시온주의자인 브래드 랜더도 지지했다. 랜더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DSA의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비난하며 DSA를 탈당한 인물이다.

민주당 내 동맹자를 늘리려는 이런 책략은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을 실망케 할 뿐이다. 이런 책략의 진정한 위험은 사회개혁 염원 대중의 에너지와 운동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급진 좌파들은 민주당을 “사회운동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DSA의 부상은 기성 정치 체제 안에서 줄타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BLM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ICE 반대·추출 운동 등으로 분출한 급진적 변화 염원 덕분이다. DSA의 약진으로 표현된 에너지가 유지·확산되는 것은 운동들의 성패에 달려 있다.

급진적 좌파는 DSA의 약진과 맘다니의 개혁 등에 (비판적이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특히, 그 지지자들과 함께 기층에서 운동을 계속 건설·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층의 운동들이 발전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힘을 사용할수록 민주당 차악론은 물론이고 DSA의 자기제한성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진다.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주류 개혁주의자들의 설명은 거의 판박이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완화된 규제, 무분별한 투기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2008년에도 그랬고, 유로존 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AI 투자 거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렇다. 이런 설명의 공통점은 위기를 체제의 정상 작동에서 벗어난 '일탈'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강화와 더 현명한 정책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좌파 개혁주의 세력 안에서 유력한 설명도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 위기의 원인이 임금 억제에 따른 소비 수요 부족에 있고, 따라서 해법은 재

분배와 정부 지출 확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런 논리의 일부를 이용했다. 물론 김유선의 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노동계급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17퍼센트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낮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뿌리는 훨씬 깊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의 핵심은 기술 혁신을 통한 자본 간 경쟁이 낳는 이윤을 저하 경향이다. 다만 실제 위기는 이윤율이라는 한 요인이 떨어져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윤율 저하가 과잉생산과 투자 축소를 낳고, 생산과 소비의 괴리와 부문 간 불비례, 신용의 팽창과 붕괴가 서로 맞물리며 위기가 구체화된다.

기술 혁신이 이윤율을 떨어뜨린다

자본주의는 두 개의 분할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하나는 자본가들 사이의 분할이다. 마르크스가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자본가들은 시장과 이윤을 놓고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력을 팔아야 사는 노동계급 사이의 분할이다. 노동자는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이 잉여가치가 이윤의 원천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핵심 수단은 신기술 도입이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한동안 비용 우위와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래서 각 자본은 노동자 한 명이 다루는 기계·설비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같은 기술을 채택하면 선도 기업의 초과이윤은 사라지고, 경제 전체에는 노동력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결과가 남는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서 새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이다. 따라서 자본 투자가 노동보다 더 빨리 늘면 이윤의 원천보다 투하자본이 더 빨리 커져 평균 이윤율에 하방 압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다. 이윤의 총량은 늘면서도 이윤율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경향'이다.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로 착취율을 높이거나, 생산성이 올라 값이 싸진 기계·원료를 쓰거나, 위기 때 파산 기업의 설비를 헐값에 사들이는 등의 '상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윤율은 해마다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축적 자체가 장기적인 이윤율 압력을 낳고, 위기가 그 압력을 파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림1 미국 이윤율 추계와 금융의 영향을 배제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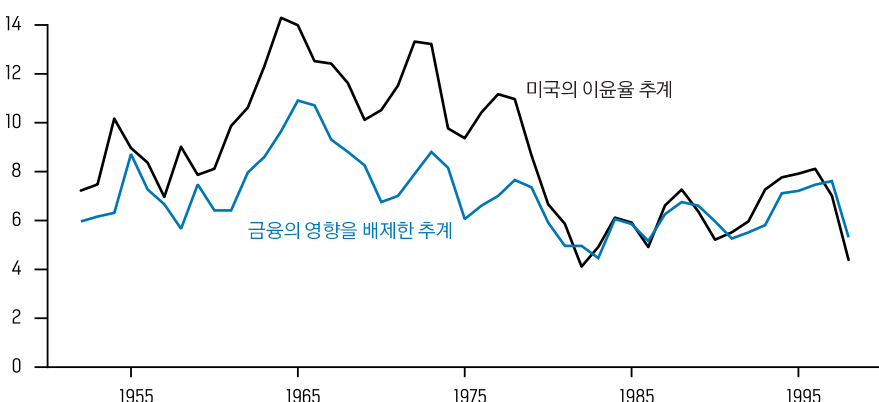


그림2 미국·독일·일본의 제조업 순이익률

(* 독일의 이윤율은 1950~90년은 구 서독, 1991~2000년은 독일의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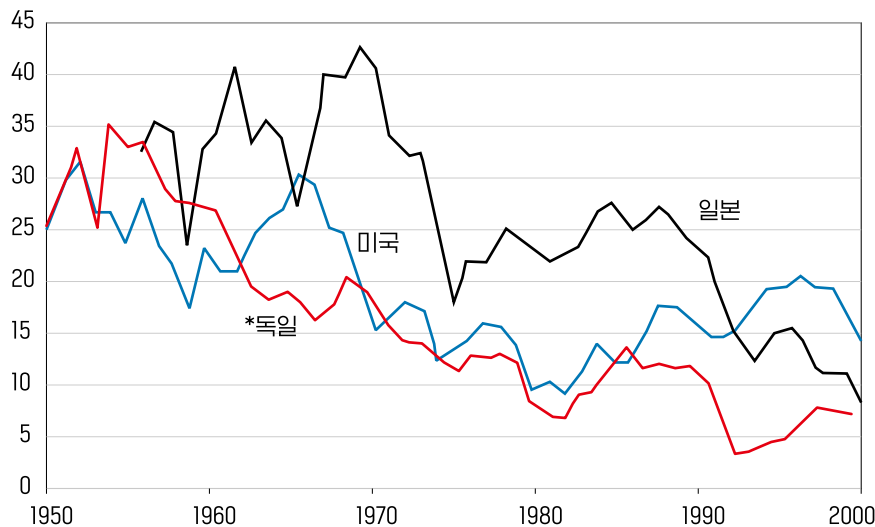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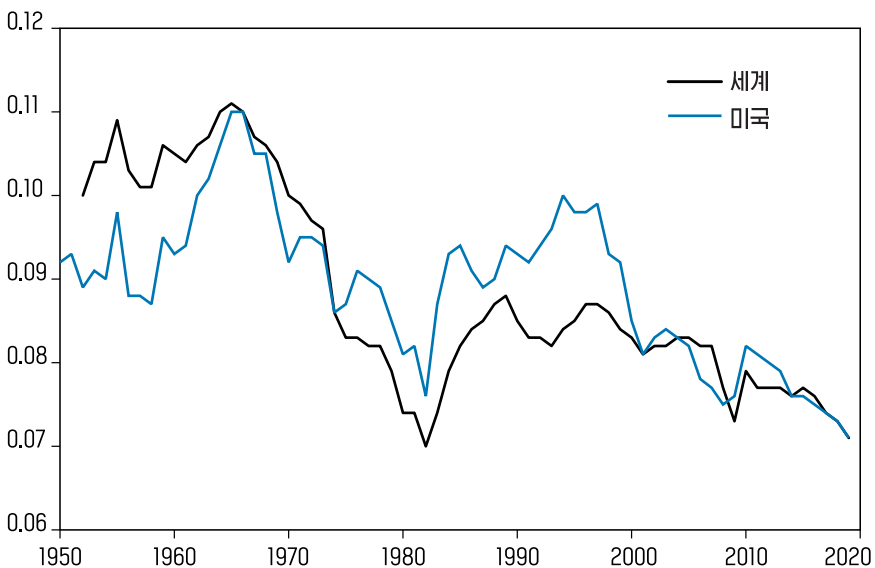


그림3 세계와 미국의 이윤율, 1950~2019년

(마이클 로버츠가 카람박시 논문에서 인용)



통계가 보여 준다

크리스 하먼이 인용한 뒤메닐과 브레너의 미국·독일(서독)·일본 경제 이윤율 수치는 이 법칙을 지지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다. 그들에 따르면, 선진 자본주의 핵심부의 이윤율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경제 공황 때까지 대략적인 하향 곡선을 그렸다.(그림1, 그림2)

마이클 로버츠가 올해 4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최근 시기까지의 세계 이윤율 추세를 보여 준다.(그림3, 그림4)

그림 5는 개도국 이윤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을 크게 웃돌다가 2007년경 정점(13퍼센트대)을 찍고 2019년 9퍼센트까지 떨어지며 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중반까지 이윤율이 일부 회복된 것은 법칙의 반증인가? 이탈리아 출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굴리엘모 카르케디는 이 시기 착취율 상승이 이윤율 회복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신자본주의 시기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깊이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윤율 계산법을 놓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림에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부분 전후 황금기의 높은 이윤율이 1960년대 후반부터 꺾였고 이후 회복이 있어도 과거와 같은 지속적 고착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공유한다.

그림4 미국 이윤율, 2023년까지

(로버츠 본인 계산, PWT 11.0, 분모는 불변자본+가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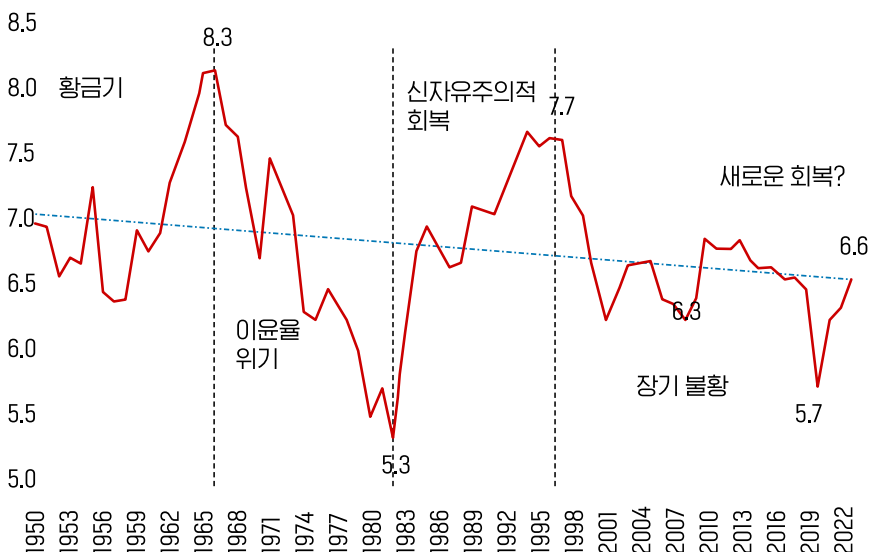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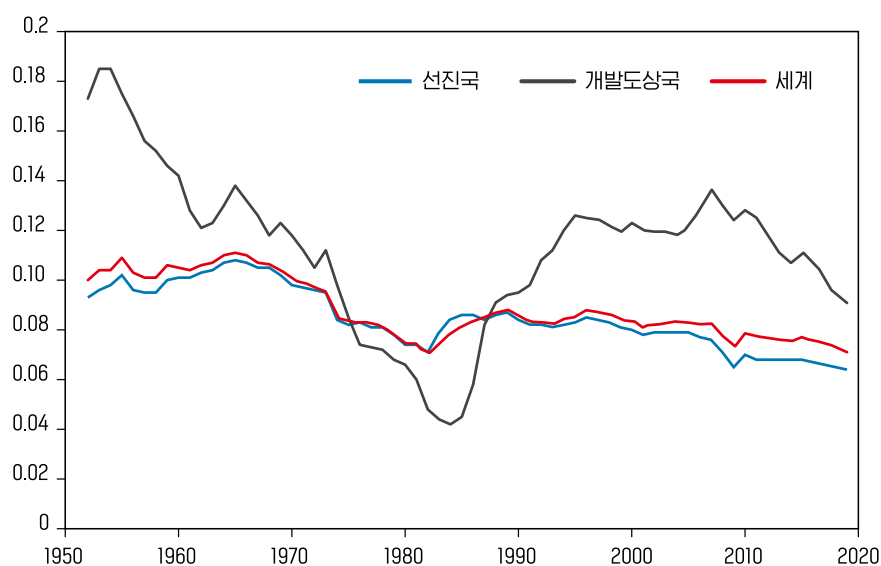


그림5 선진국·개발도상국·세계 이윤율 비교



금융은 근본 원인이 아니지만 위기를 증폭시킨다

생산 부문의 이윤율이 낮아지면 과거에 축적된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잉여가치의 더 큰 몫)을 찾아 금융·부동산·투기로 몰릴 유인이 커진다. 그러나 금융은 생산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외부 기생충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한 설비투자와 긴 생산·유통 사슬은 신용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류자금을 투자 자금으로 연결하고 미래의 이윤을 앞당겨 현재의 축적을 확대한다.

바로 그 때문에 신용은 위기를 늦추면서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호황기에는 미래 수익을 낙관해 대출과 투자가 함께 늘고, 주식·채권·주택담보증권 같은 가공자본의 가격도 오른다. 그러나 실제 생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부채가 늘면, 작은 수익성 악화나 자산

가격 하락이 연쇄적인 디폴트와 신용 경색을 부를 수 있다.

2008년이 전형적이다. 서브프라임 대출(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확대와 그 증권화는 위기의 중요한 방아쇠이자 전파 경로였다. 하지만 크리스 하먼이 강조하듯, 금융화는 장기 호황 뒤 낮아진 이윤율과 둔화된 생산적 축적에서 자라났다. 금융화의 성장은 불안정을 크게 키웠지만, 불안정과 위기를 처음 만들어 낸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원인과 결과는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되먹임했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도 단순히 '정실 자본주의'나 외국 투기자본 탓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경제 급성장에 축적된 거대한 설비와 경쟁적 과잉투자, 이윤율 압력, 단기 외화차입이 결합했고 자본유출과 환율 붕괴가 그 취약성을 폭발시켰다.

소비 위축으로 위기를 설명하는 건 불충분하다

일반적인 과소소비론은 임금이 억제돼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되살 수 없다는 데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분배가 문제의 뿌리라는 진단이다. 이 진단이 옳다면 처방도 분명하다.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해 구매력을 회복하면 자본주의는 다시 작동할 수 있다.

과소소비론이 주목하는 모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잉여가치는 상품이 실제로 팔려야만 실현되며, 노동자 소비의 제약은 가치 실현을 가로막는 실질적 압력이다. 기업이 임금을 억제해 이윤율을 방어하면 소비재 시장이 위축돼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서 과소소비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임금 억제는 착취율을 높여 이윤율을 방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과소소비론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요인은 이윤율 저하를 막는 상쇄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자본가가 임금을 억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탐욕 때문이 아니라 이윤율 압박에 대응하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이 분배에 있다면 분배 구조를 고쳐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본에 임금 억제를 강제하는 압력은 분배 이전의 층위에서 발생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의 소비가 총수요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자본가의 기계, 공장, 원료 구매가 거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2권의 재생산표식에서 보여 준 바가 바로 이 점이다. 생산수단 부문과 소비재 부문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면, 노동자의 몫이 아무리 작아도 총생산물은 원리적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다. 임금이 낮다는 사실 자체에서 판매 불능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호황기에는 투자가 투자를 부르며 자본 축적이 스스로를 지탱한다.

이윤율

문제는 이 투자가 무엇에 좌우되는가이다. 자본가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서가 아니라 경쟁에 쫓겨 투자한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생산성을 높여 경쟁자보다 싸게 파는 것이고, 그러려면 노동자 한 명당 더 많은 기계와 설비를 투입해야 한다. 그 결과 총투자에서 기계와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력에 비해 계속 커진다. 마

르크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잉여가치를 낳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노동이다. 각 기업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 수준에서는 잉여가치의 원천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투하된 자본은 불어나는데 그 자본이 짜낼 수 있는 잉여가치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결국 이윤율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어제까지 정상 가동되던 설비의 상당 부분이 더는 수익성 있게 가동할 수 없는 설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과잉생산이다. 이는 사회적 필요에 비해 과잉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수익성 기준에 비추어 과잉된 상태를 뜻한다. 굶주린 사람이 넘쳐나는데도 곡물이 폐기되고, 노숙자가 늘어나는데도 아파트가 빈 채로 방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순서가 결정적이다. 이윤율이 하락하면 자본가는 투자를 중단한다. 투자가 중단되는 순간 투자재 수요도 사라진다. 해고가 뒤따르며 소비재도 판매 부진에 빠진다. 상품 미판매 현상은 과소소비론이 관찰한 그대로지만, 이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이윤율 저하가 표면화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낮은 이윤율과 과잉생산은 별개의 원인이 아니라 동일한 과정의 양면이다.

이러한 구분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과소소비론이 타당하다면 위기는 분배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며, 개혁주의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반면 위기의 근원이 경쟁적 축적 자체에서 비롯했다면, 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절실한 요구일지라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스스로의 존립 조건을 파괴하는 현상은 교정 가능한 결함이 아니라 체제의 작동 방식 자체이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결론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그런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다만 '노동자의 소비가 늘면 자본주의도 건강해진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 투쟁은 자본의 이윤을 압박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급투쟁이다.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위기는 끝나기는 하는 건가?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 자본 가치를 파괴하고 이윤율을 회복하려 한다. 취약한 기업이 파산하고, 살아남은 기업이 설비와 원료를 헐값에 사들이며, 실업을 이용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압박한다. 이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면 새 투자가 다시 수익성 있어 보이면서 다음 상승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윤율 저하가 위기를 낳는 동시에 위기가 이윤율 저하를 부분적으로 해소한다.

그렇다고 정부 개입이 아무 효과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지출과 유동성(자금) 공급은 수요 붕괴와 연쇄 파산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경쟁적 축적과 낮은 이윤율 문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국가는 부실자본을 유지해 자본 파괴를 늦출

수도 있고, 반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그 비용을 노동자와 약한 자본에 전가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장기 호황도 주로 케인스주의나 전쟁의 자본 파괴로 설명할 수 없다. 대불황과 전쟁의 자본 파괴는 높은 전후 이윤율의 출발점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사반세기에 걸친 호황의 지속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냉전기의 막대한 평시 군비지출, 즉 상시군비경제였다. 군비지출은 잉여가치의 일부를 생산적 재투자에서 빼내어 유기적 구성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국가 주문을 제공했다. 이 효과가 약해지고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1970년대 초에 위기가 돌아왔다.

AI 거품 문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오늘의 AI 투자에 적용할 때는 'AI라는 신기술이 도입돼 자동으로 이윤율이 떨어지고 곧 위기가 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선도 기업은 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신기술이 생산수단을 싸게 하거나 새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착취율 상승 같은 상쇄 요인도 작동한다.

그러나 경쟁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설비에 거액을 동시에 투자하고 기술이 빠르게 보편화되는데 실제 이윤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선도자의 초과이윤은 사라지고 기존 설비의 가치가 빠르

게 떨어지며, 신용과 높은 주가에 의존해 유지되던 투자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 그런 경우 AI 호황은 1990년대 통신·닷컴 붐처럼 생산적 과잉축적과 금융 거품이 결합된 형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지루한 노동을 없애고 의료와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윤 경쟁 아래에서는 일자리·임금·노동강도에 대한 공격과 군사적 이용이 우선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생산과 투자를 통제하는가이다.

케인스주의 문제: 결론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서유럽 좌파 개혁주의의 임금주도성장론을 생색내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정책화한 것이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NGO는 처음에 일정한 기대를 걸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케인스주의 전통에 속한다. 다만 보수적 경향이 아닌 좌파 케인스주의에 속한다. 핵심 원리는 유효수요와 근본적 불확실성이다. 투자는 계산 가능한 기대가 아니라 좌파 케인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야성적 충동"에 좌우된다. 투자 결정은 흔히 미래 수익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계산에 필요한 확률 분포를 아무도 알 수 없다. 20년 뒤 어떤 기술이 지배적일지, 그때 이 설비가 얼마를 벌어들일지 확률을 계산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투자를 감행한다. 케인스는 이 결정이 결국 계산이 아니라 자발적 충동에서 나온다고 봤다.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낙관적 전망이 우세할 때 뛰어들며, 그 낙관이 꺾이면 (계산 조건이 그대로여도) 투자는 멈춘다. 이처럼 투자가 심리적·관습적 요인에 좌우된다면 저축이 자동으로 투자로 전환될 보장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완전고용 균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는 유효수요 부족이 상시화할 수 있음을 뜻하며, 앞서 언급한 '근본적 불확실성' 개념의 핵심 근거가 된다.

근본 원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설명이 멈추는 지점이다. 투자가 꺾이는 이유를 단지 '낙관이 사라져서'라고 답하는 것은 현상을 심리 요인으로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낙관과 비관이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지는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기대는 심리가

아니라 실제 이윤율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낙관이 사라져서 투자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관이 사라진다. 인과의 방향이 정반대인 셈이다.

물론 케인스주의 측은 이것이 심리학이 아니라 인식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계산 근거가 객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관습과 집단적 기대가 실제로 독립적인 인과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케인스주의는 위기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 찾는다. 따라서 국가가 수요를 관리하면 자본주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윤율이 아니라 지출이 문제이므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는 앞서 비판한 과소소비론이 적용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위기의 근원이 정책 실패가 아니라 경쟁적 축적과 이윤 중심의 생산에 있다면, 규제와 재분배만으로 위기 없는 자본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규제와 복지, 공공투자를 위한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본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자본주의 위기 관리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요구와 자본의 이윤율은 위기 시기에 특히 날카롭게 대립한다. 위기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려면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 주체들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케인스주의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단지 경기부양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위기를 체제의 교정 가능한 오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체제 자체의 내적 모순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전술핵 확대 검토하는 미 전쟁부

동아시아를 핵전쟁의 전장으로?

8월 5일 미국 방송 매체 NBC는 미국 전쟁부가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전 사용 부담이 큰 전략핵무기 대신 전술핵무기를 부각시킨 것은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전쟁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전술핵이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미군 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새 핵전략 검토는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미국이 '제한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호전적 우익 인사다.

5일 NBC 보도 직후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 비공개 연설을 했고, 미국 언론이 그 녹음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 연설에서 콜비는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특정 지역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확대돼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합리적인 핵 옵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미국도 그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무기 경쟁이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핵전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다양화하고 있다. 현재 핵탄두 600기 이상을 갖고 있고,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수 있다.(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핵무기가 훨씬 많다.) 러시아도 최신형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한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도 경쟁국들을 상대로 핵 우위를 유지하려고 애써 왔다. 가령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뒤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며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까지 완료했다.

지난해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 미국도 해야겠다"며 핵실험



미 전쟁부 엘브리지 콜비의 구상은 한국 땅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위험이 있다

재개를 촉구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또한 미 해군은 해상 기반 핵 순항미사일(SLCM-N) 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해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등 5개 무기 업체에 시제품 제조 임무를 배정했다.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되는 맥락 속에서 엘브리지 콜비가 새로운 핵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술핵으로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전하며 미국 제국주의의 신뢰성이 추락한 상황을 의식한 움직임일 것이다.

미국이 걸프만 동맹국들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자, 그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지배자들도 미국이 유사시 자국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됐다.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소진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 추진으로 기율 공산이 커진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현재 200기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며, 상당수가 유럽 기지에 배치돼 있다고 한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늘리고 아시아에 재배치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간 경쟁 압박은 지배자들이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키운다. 실제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같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수년 전부터 대만해협의 가상 전쟁을 검토하며 핵전쟁까지 가는 시나리오들을 제시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무기 확대를 결정한다면, 이는 아시아 내 미군 배치와 전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전술핵 운용에 기초한 전술 변화와(한국, 일본 등과의) 연합 훈련이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

나아가 대만이나 한반도 인근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가 휘말리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제한된" 전쟁이겠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적어도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미국 내 논의를 계기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조선일보>도 이참에 핵공유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마치 쏜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힘이 무책임하게 "안보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핵협의그룹(NCG)에 기반한 기존의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만으

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바로 그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무장 반대론은 전혀 일관되지 않다.

미국 전쟁부의 새로운 핵전략 검토는 제국주의의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리고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위험하다는 오랜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익

용어설명

전략핵과 전술핵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는 보통 파괴력의 차이로 구분한다.

전략핵은 수백 킬로톤(kT)에서 메가톤(MT)급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 적의 영토나 국가 기반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을 지닌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핵무기로, 통상 수십 킬로톤 수준의 저위력 핵무기를 말한다.

전략핵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를 투발 수단으로 이용한다. 반면 전술핵은 전투기, 단거리 미사일, 야포, 지뢰 등에 장착할 수 있고 핵배낭으로 병사가 운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술핵도 매우 위험하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5킬로톤급 핵폭탄 '리틀 보이'로 인해 14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저위력 핵폭탄은 파괴력을 키워 수백 킬로톤에 달하는 전략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10월 11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에 모이자 팔레스타인을 잊지 말자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가자 전쟁 3년을 맞아 열리는 전국 집중 집회일 뿐 아니라, 지난 6월 20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 반전 회의에서 제안된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이 주최한 이 회의에는 영국, 팔레스타인,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에서 온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지난 10월 발효된 가자 휴전은 사실상 더딘 인종학살에 불과했다. 가자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지난 8월 10일 기준 1,258명에 달한다. 이른바 ‘옐로 라인’

으로 구획된 이스라엘군 점령지도 가자지구 면적의 53퍼센트에서 64퍼센트로 스멀스멀 확대됐다. 구호 물자 통제도 계속돼 가자 주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하단 기사 참고)

지난 몇 달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중동이 전화에 휩싸인 와중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가자 관리 구상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 잡음이 있지만, 트럼프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서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지속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인종학살과 그에 대한 자국 정부의 공모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 줄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보통 사람들도 여기에 가세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5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범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불과 일주일 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는 이스라엘 기술 기업들의 포럼에 참석했다.

10월 11일 공동 행동은 국제 노동자 행동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제 반전 회의의 제안에 호응해 10월 30일에는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CGT) 항만노조, 그리스 피레아스 컨테이너 하역 노조(ENEDEP), 바스크 민족 노동자 위원회(LAB), 튀르키예 항만노조(LİMAN-İŞ), 모로코

민주노동자조직(ODT), 이탈리아 기층노동조합(USB)이 공동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월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벌인 노조들에 CGT 항만노조도 가세한 것이다.

자신이 속한 대학 캠퍼스와 일터, 지역 사회에서 10월 11일 공동 행동을 널리 알리자. 그리고 집회를 성대하게 개최해 팔레스타인 연대가 굳건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자.

이원웅

함께 참가합시다!

가자 학살 3년 전국 집중 집회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10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추후 공지)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폭격, 팔레스타인인들은 말한다: “우리는 연대를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나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점령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네타냐후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한 ‘15개조 가자 계획’을 거부했다. 하마스가 “진정으로” 무장 해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식민 지배를 위한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의 ‘평화 이사회’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운동 조직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모든 형태의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할 때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지구를 폭격하며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칸유니스 인근의 알카라라와 가자시티 등지를 폭격해 이번 달에만 팔레스타인인 20여 명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알라아 씨는 가

자시티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이다. 알라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또 다른 폭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공중 공격 때문에 사람들은 탁 트인 공간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머니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지 말라고 제게 당부합니다. 밖에 나온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알라아 씨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돼야 할 구호 물자를 계속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 반입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은 질이 낮고 영양가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가는 천막에 삽니다. 돈이 없어서 천막을 교체할 수 없어요. 새 천막은 엄청 비싸거든요.

“엷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이 기승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피부병도 생깁

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 그 물도 오염돼 있어요. ‘옐로 라인’ [이스라엘군 주둔 구역의 경계 — 역자]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저격수의 총에 맞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테이르 알발라에 세워진 임시 병원에서 일하는 이빛삼 씨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체계적인 궁핍화와 파괴를 날마다 목도하고 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입도, 보안도, 치안도 없어요. 물건을 도둑맞을까 봐 걱정하고 위협을 느낍니다.

“쥐가 창궐해 식량과 천막을 갉아 먹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다가 쥐에 물릴까 봐 뜯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은 소화기·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피부병도 유행하고 있어요.”

이빛삼 씨는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촌인 부레이즈에 가족이 있다. 가자지

구 동부의 옐로 라인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서 이빛삼 씨의 가족들은 움푹 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시로 바뀌는 경계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자가 돼 왔습니다.”

“가자지구는 감옥입니다. 경계는 폐쇄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격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를 호소합니다. 제 안의 인간성은 연대와 공감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데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봉쇄를 끝내며, 점령과 인종학살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야 한다.

주드 맥케크니

출처 Jude Mckechnie, ‘Palestinians say ‘Gaza is a prison’ as Israel continues bombings’ (2026. 8. 9) / 번역 이원웅

악화되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

▶ 12면에서 이어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해 43.3퍼센트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40퍼센트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30대의 지지율 하락 폭이 매우 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방선거 후 30대 지지율이 53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14퍼센트포인트나 떨어졌고, 20대 지지율도 41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8퍼센트포인트 떨어졌다.

최근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페버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가 '본인부터 페버스에서 살아보라'는 조롱을 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민 주택 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 정책에 치중하고 있지만, '똥똥한 한 채'는커녕 '똥똥하지 않은 한 채'도 없는 노동계급 대중 입장에서 이런 정책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전월세 상승

오히려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금 인상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강남3구 외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



청년들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정부는 값비싼 주택의 공급만 늘도록 도와준다

고, 이는 다시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가 세입자인 2030 청년층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위해 대부분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만, 월급을 수십 년 모아도 10억 원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7년을 모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서울의 30대 무주

택 가구는 52만 7,000여 가구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 3,000여 가구에 그쳤고, 주택 소유율은 25.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청년층의 주택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57.4퍼센트에서 58.4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 높아졌지만, 청년 가구(가구주 19~34세)는 14.6퍼센트에서 12.2퍼센트로, 신혼부부 가구(결혼 7년 이내)는 46.4퍼센트에서 43.9퍼

센트로 낮아졌다.

주거의 질도 하락했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6.1퍼센트에서 8.2퍼센트로 뛰었다. 고시원·컨테이너·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청년 가구 비율도 5.3퍼센트로, 전체 평균(2.2퍼센트)을 크게 상회한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려면 1인 가구의 경우 고작 14제곱미터(약 4평)에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에 사는 청년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한다.

주택 문제의 진정한 대안

노동계급의 주택 문제는 시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앞서 봤듯이 부동산 공급 확대로 집값을 낮춘다는 방안은 부유층에게만 득이 될 뿐이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남아 있는 한 이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조장하는 동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구직자 처지로 내몬다. 그러면 애써 마련한 주택도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를 완화하

려 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살 만한 장기·영구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한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8.5퍼센트(192만 가구)로 OECD 평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5년, 10년에 불과해 공공임대로 보기 어려운 분양 전환 주택과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5퍼센트에 불과하다.

역대 한국 정부들이 비용 회수를 위

해 공공임대주택 중 상당수를 민간에 판매하는 분양전환 정책을 펴 온 탓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억제돼 왔다.

게다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40제곱미터 이하로, 빈곤층이 길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는 수준이라 어지간한 노동계급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주택도 아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이 대거 확충돼야 한다.

그러려면 후한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예측하면서도 이를 기업 지원에 쓰려 할 뿐, 서민층의 복지 지원에는 인색하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반미자주파의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 —
계급 협력으로는 우익을 제압할 수 없다

★ 반도체 호황 수혜 독차지하려는 사용자 측에 맞선
리노공업 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미 7공군 항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석방하라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강동훈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이른바 ‘뽕뽕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하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극소수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만 일부 강화하는 ‘보여 주기’ 수준에 그쳤다.

누더기 개편

부동산 세금 인상이 효과를 내려면 고가 주택의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등 기대수익률이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장기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깎아 줬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으로 높였다. 공시 가격이 시세의 60~70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됨을 고려하면, 시가 20억 원의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전체 1,558만 가구 중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주택은 2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주택 가격 상위 1.6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가 30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거주자들은 오히려 보유세가 감소한다. 시가 40억 원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거주 공제와 고령 공제 등을 합산해 최대 80퍼센트까지 세금을 깎아 주면 종부세 부담이 734만 원에서 약 14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럼에도,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후퇴 조짐이 보인다. 예컨대 한 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며 세금 감면 확대를 시사했다. 안 그래도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세제 개편안이었는데 더 큰 구멍이 뚫리게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런 세제 개편조차 ‘세금 폭탄’이라며 부자들 편을 들고 있다.

부자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세금 강화는 노동계급 주택 문제 대책이 되기 힘들다. 올해 초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를 종료했을 때 일시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강남 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공급 확대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신화

국힘과 보수언론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또다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연달아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를 했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먼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공산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성과 부동산 경제에 공급이 좌우됐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늘려야 한다는 국힘의 대책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안은 주택 수 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집주인들 사이의 반감과 갈등, 지역 유지들의 반발 등으로 역대 정부들도 계속 실패해 왔다.

제대로 공급이 확대된다 해도, 집 없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나 국민의힘의 공급 방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매매를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노동계급 다수는 그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 원리 아래에서는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유층의 투기용 부동산 수요나 충족시켜 줄 것이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높아져 고통만 커질 뿐이다.

▶ 11면으로 이어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악화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시 8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 2층 다목적실 (홍대입구역 4번, 7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악화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시 8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룹 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